투데이 칼럼

북한 막말 위협과 중국의 압박

정 복 규

논설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거세지고 있다. 강 대강으로 치닫는 형국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선제 타격 같은 위험한 시도를 하면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대규모 항공 작전 훈련을 펼치며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북한에 강력 경고했다.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 통일, 국방부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얼어붙은 현 정세의 돌파구가 뭘지 주목된다. 최근 낡은 군복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노병들이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역에는 군악대까지 동원됐고, 가는 곳마다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

6.25 전쟁에 참전한 북한 노병들을 기념하는 전국노병대회 모습이었다. 80~90대의 노병들뿐만 아니라 군인과 대학생도 대회장을 가득 채웠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이른바 전승절로 부른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념행사 연설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가 언급해왔던 대북 선제타격도 겨냥했다. 미국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핵전쟁 억제력'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막말 위협 속에 한미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다.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대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안전 보장 방안까지 담겠다며,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육군은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했던 항공 작전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주한미군도 한국에만 유일하게 순환 배치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의 실사격 훈련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전술핵과 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전개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장치이다.

2016년 말 첫 회의를 연 뒤 2018년 북핵 협상으로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에 대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안전보장 방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관계의 외교적,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군비통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 보장 안에 대한 남북의 관점이 명백히 다른 것도 현실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사드 3불' 입장을 내놨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을 다시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사드를 포함한 안보 주권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칩4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에 대해서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화상 면담을 예로 들며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막말 위협, 한미의 동맹 강화를 통한 맞대응으로 강 대 강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대화보다는 긴장 고조와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지브롤터 해협 유출 기름 제거하는 예인선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령 지브롤터항 인근에서 예인선들이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LNG 운반선과 OS35 벌크선이 충돌해 벌크선에서 소량의 중유가 유출됐다.

홍수로 집 잃은 파키스탄 어린이들

지난 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차르사다에서 홍수로 집을 잃은 어린이들의 모습이 가구의 거울에 비치고 있다. 파키스탄 보건 당국은 최근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밝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사 설

전주시, 규제 완화 논란

전주시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건물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규제를 완화해 옛 도심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실 전주 옛 도심의 경우 신도심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 일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전체 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많은 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개발 이익이 그만큼 커진다.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전주시의 용적률은 2백30%이다. 허용 범위인 2백50%에 조금 못 미친다. 전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인구 50만 명 규모의 다른 도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높이 40미터 이상 건물 심의도 없애기로 했다. 시의회와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용적률을 대도시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환경단체는 한옥마을과 그 일대 등 역사 문화자산에 기반을 둔 옛 도심의 고유한 정체성이 난개발로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한번 사라진 역사성은 되돌릴 수 없다며, 도시계획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일조권, 바람길 등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상인 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영화의 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논쟁까지 있을 전망이어서 갈수록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 해충 없애는 천적 농법

전북 도내 일선 농가에서 해충을 없애는 천적 농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 보존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노동력도 줄여주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다 보면 갖은 병해충 때문에 농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농약 대신 천적을 활용한 농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친환경적이면서, 노동력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물 줄기에서 즙을 빨아 먹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가루이'가 발생한 멜론 밭은 한 번 퍼졌다 하면 좀처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해충을 천적인 '장님노린재'를 풀어 확산을 막았다.

농약을 썼다면 9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에 적어도 3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천적 벌레 값 12만 원을 쓴 것이 전부다. 고추를 키우는 곳에서도 '진디벌'을 풀어 '진딧물'과 '응애' 같은 해충을 없앤다.

인력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천적을 가지고 한 바퀴만 돌면 그 다음부터는 해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익충을 활용한 천적 농법은 농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지키고, 해충의 농약 내성까지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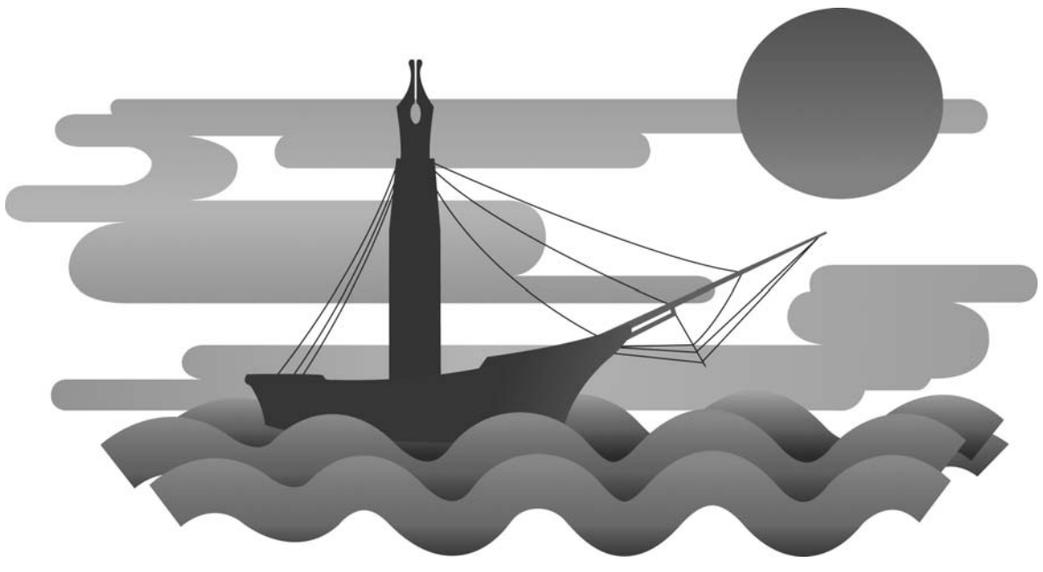
토양과 하천 오염을 막고, 농작물 상품가치도 높여 유럽과 북미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천적 농법을 이용하는 농가는 전체의 5%에도 못 미친다.

농촌진흥청도 천적 농법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익충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농가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만큼 생산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현재 국내 천적 농법에 쓰이는 익충은 스무 종 가량이다. 우리 기후와 토질, 작물 여건에 맞게 새로운 천적을 찾아내고, 종류도 늘려나갈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